

한국교육행정학회소식지

THE NEWSLETTER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제104호
2010. 7. 31

-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www.kssea.or.kr) ■ 발행인 송광웅 ■ 편집인 정수현, 신철균
- 주소 (137-7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우면로 161 서울교대 인문관 414호
- TEL 02-3475-2522 ■ E-mail kssea1@hanmail.net

교육행정학연구 별책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 (www.kssea.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대학 시간강사 대책 시급하다*

임연기(공주대 교수)

I

대학에서 교원은 대학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크게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대학교육은 전임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전임 교원만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일시적인 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비전임 교원제도의 운영을 배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즉, 교원 인사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전임 교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 여러 대학들도 다양한 비전임 교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비전임 교원의 규모와 위상은 어떠한가? 전국 4년제 대학에만 비전임 교원 수가 약 8~9만 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시간강사는 약 5~6만여 명, 겸임·초빙 교수 등 기타 유형의 비전임 교원은 약 3만 명에 달한다. 전임 교원 수가 약 8만 5천명 수준이기 때문에 전임 교원 수와 비전임 교원 수가 비슷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 강의 전체의 약 1/3 이상을 시간강사에 의존하고 있음은 놀라울 일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일은 시간강사는 시간당 평균 강의료가 매우 적고, 아울러 강사실과 같은 물리적 환경 및 연구여건 등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대학에서 시간강사는 대학교육의 중요한 축을 떠맡고 있다. 대학에는 법정 전임교원확보율이라는 명쾌한 기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모든 대학들이 법정 기준에 크게 미달될 수준으로 과도하게 시간강사를 활용하여 대학교육을 지탱해 오고 있다. 아울러 시간강사들은 그 역할에

상응하는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학 전임 교원의 지위 및 처우는 오래 전부터 법적,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지만 이에 비해 시간강사의 경우는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사실 대학 시간강사의 비정상적 운영 행태, 열악한 근무 조건에 대한 비판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고, 점진적인 개선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 교원의 계약임용제 도입 및 확대, 대학 재정의 영세성에 기인한 인건비 추가 부담의 한계, 전임 교원의 강의 부담 적정화 등의 이유로, 시간강사 이외에 비전임 교원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반면에 시간강사의 신분과 지위, 임용 기준과 절차, 강의 시수, 보수 및 근무조건 등 인사 제도와 운영상의 제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6년 12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비정규직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2007. 6. 18)으로 대학 시간강사의 지위와 처우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2007년 7월부터 2년 근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일단 대학 시간강사는 그 대상에서 제외(비정규직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되었다. 다른 사업 및 사업장의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 대학 교육에의 부정적 영향 등에 따라 대학 시간강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법제 및 정책적 개선 대책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한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할 시간강사 제도가 그 규모 차원에서, 그리고 전임 교원과의 처우 격차 차원에서 극도로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대학 시간강사 문제는 고등교육의 선진화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시간강사의 강사로 인상과 같은 한정적, 일시적 개선보다는 시간강사의 일정 비율을 전임 교원급으로의 점진적 전환과 같은 근본적이고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II

외국의 대학들은 어떤 시간강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미국의 대학에서는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간강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시간강사의 비율은 지극히 낮고 이들에 대한 신분도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 대체로 시간강사의 비율이 전체 교원의 2%를 넘지 않고 있으며 이들도 연속 3년 이상 적정 시간을 담당하였을 경우 계약제 교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보수도 전임 강사 수준보다 높거나 이들과 유사하다. 시간강사에 대한 대우를 잘 해 줌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함으로써 학교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임용하고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분보장의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학과나 연구소의 여건에 맞게 운영

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여겨진다. 또한 시간강사에 대한 보수를 시간단위로 하지 않고 전임 교원(FTE)의 일정비율로 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시간당 강사료가 아니라 전임 교원의 0.5 또는 0.7 등의 비율로 보수를 지급하여 보수 수준을 안정화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강사료 책정에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 물론 시간강사는 비전임이기 때문에 학교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경영에 참여하는 교원은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호주의 대학들은 연구의 수월성 추구하고 함께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간강사 등 비전임 교원제도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호주의 대학들도 대학 학사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위해 시간강사와 같은 비전임 교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전임 교원의 일시적 결원이나 단기적으로 교원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간강사들의 불안정한 신분은 강의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 대학에서는 시간강사의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임용과 고용종료 등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으며,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방식을 통해 적절한 인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강사 등 비전임 교원 제도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대학당국이나 지원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되는 대목이다.

호주의 대학들이 시간강사 등 비전임 교원제도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강의전담(teaching only)교원 제도라 생각된다. 이러한 강의전담 교원들은 대학에 소속된 전임 교원으로 연구의 부담 없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시간강사들이 담당하는 시간들을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강의전담 교원들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연구실에서 강의준비와 학생 면담 등 학생지도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연구와 교육을 모두 담당하는 전임 교원에 비해서는 임금과 학문적 책무성에 제한이 있지만 신분의 불안감이 없기 때문에 보다 학생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I

대학교육에서 시간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들에 대한 처우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는 대학교육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학문 후속세대의 육성에 크나 큰 장애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하여 시간강사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학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주장들은 강사료의 현실화, 채용방법의 공개화, 기타 4대 보험, 퇴직금, 연구공간의 제공 등 처우의 획기적 개선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안들은 타당하기는 하나 과도한 시간강사 규모를 축소 조정하여 적정화시키는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비정규직 성격의 시간강사 신분을 유지시킨 채, 강사로 인상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시간강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제 대학에서 과도하게 남발되고 있는 시간강사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그런데 시간강사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임교원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기존의 전임교원과 같은 역할과 책임 면에서 제한적이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가칭 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하여 자격을 갖춘 시간강사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는 구조적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강의전담교수란 대학에 소속된 전임교원으로 연구나 행정 업무의 부담 없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여기서 전임교원이라 함은 적절한 심사를 거친 후 반복적인 재임용을 통하여 정년에 이를 수 있는 교원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강의전담교수들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연구실에서 강의준비와 학생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다. 물론 연구와 교육 그리고 행정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전임교원에 비해서는 처우가 뒤쳐지지만 신분상의 불안감이 없기 때문에 보다 학생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부 사립대에서 유사 강의전담강사제 또는 비정년트랙 교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비정년트랙 교원은 임용기간을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신분보장을 담보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시간강사제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유념해야 한다.

강의전담교수제의 도입과 확산은 다음과 같은 전제하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강의전담교수는 기간제 계약에 의해 채용하고 보수를 현실화시킨다. 특히 지속적인 재임용 과정을 거쳐 정년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신분의 안정화를 통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요체라고 생각한다. 둘째, 현재의 전임교수 비중을 단계적으로 개선시키는 조건 하에서 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한다. 자칫 강의전담교수가 현재의 전임교원을 대체하는 변칙적인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산출할 때 강의전담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함으로써 대학이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바람직하게는 제도 도입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국가와 대학이 분담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입학자원의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학교실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 확산하도록 권장한다. 대학들이 자발적 선택에 의해 제도의 도입 및 확산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 이 글은 임연기, 최준렬, 박삼철(2007)의 「대학 비전임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보고서에서 발췌, 수정 및 가필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I 논단 I I

미래교육을 위한 씨앗

천 세 영(본회 재정·기금위원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장면 1: 인류문명의 기원

인류의 문명사는 동물과는 다른 두 가지 다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하나는 도구를 발명하여 생산력을 증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그 둘은 그 도구에 대한 기억을 이웃과 자손에게 전하여 생산력의 확대재생산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자는 불의 발견으로 대표되며 후자는 문자의 발명으로 대표된다. 최초의 불은 부싯돌로 힘들게 얻었으나 이제 핵융합 발전을 통해 수억 도가 넘는 고온의 불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k-star핵융합가속기는 1억 도의 불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정도로 뜨거운 불을 만지는 나라도 전 세계에는 몇 나라 되지 않아서 2040년 3억도를 목표로 하는 ITER프로젝트 7개국을 우리가 리드하고 있다. 고려청자를 만들 수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도 당시로는 세계 최고로 뜨거운 섭씨 1300도의 불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류가 동물과는 전혀 다른 진화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5만여년 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음성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인류의 두 개골은 동물과 달리 비강과 구강, 기도와 식도간의 간격이 커지고 목이 길어지면서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는 음성을 만들고 급기야는 언어와 문자를 발명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물론 처음에 인간은 동굴에 숨어살며 낮의 사냥터에서 들소를 잡은 영웅담을 동굴 벽에 새겨 넣었다. 그 후로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부터 약 5백년 전 조선의 천재 세종은 훈민정음이라는 최고의 문자를 발견해냈다.

이 두 가지 다름은 결국 기술의 발견과 기록의 발명을 의미하며 특히 후자 기록의 기술은 전자의 생산기술보다 훨씬 근본적인 인류사의 핵심 코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인류사는 전세대가 살아온 이야기를 후세대에 전달함으로써 시작되었고 발전하였으며, 그러한 전달과 소통, 그리고 기록과 역사를 담당할 교육을 가질 수 있음으로써 완성되었다. 인간은 왜 그렇게도 쓰기에 골몰했던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장면 2: 여러 가지 모양의 문명

이미지로서의 역사, **양코르 와트(AD9~12c)**: 양코르 왕국은 거의 정확하게 우리의 고려 왕조와

시대를 같이한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고려는 금속활자를 세계 처음으로 발명하였으며 과거를 통해 인재를 등용했고 고려사를 남긴데 비해 앙코르는 불가사의 한 토목기술을 자랑하였지만 어디서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시작되어 왜 끝이 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고려는 역사 속에 살아있지만 앙코르는 역사 속에 잊혀졌고 정글에 수백 년 동안이나 갇혀있었다.

예술의 나라, 아르메니아: 피타고라스는 소크라테스보다 100여년 전에 살았다고 한다. 그가 발견한 것은 숫자의 비밀이었다. 우주는 숫자의 질서로 정연하게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아름다움의 비밀 뒤에는 1:1.618의 황금비율이 있음을 알았으며, 파르테논 신전이 지어졌다. 아르메니아인들은 가르니에 계곡에 파르테논을 빼닮은 태양신전을 지었다.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으며, 인류최초의 우카리트 썩기문자를 발전시켜 AD400년에는 아르메니아 알파벳을 발명했다. 그러나 근세사에 들어 아르메니아인들은 종교 갈등의 끝에 인종말살의 비극을 겪어야 했고 가족의 셋 중 둘이 고국을 떠나야 했다. 그들은 소련연방국들 가운데 가장 많은 예술가를 배출하여 그들의 슬픈 역사를 토로해야 했다.

조선의 비밀, 기록 유산의 나라: 도대체 어찌자고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도 기록에 목을 댔을까? 왕의 일거수일투족이 사관의 붓끝에서 기록되었다. 거대한 중국의 역사책보다 조선 왕의 승정원일기의 글자수가 더 많다. 두 번의 혹독한 전쟁을 치르고도 500년 넘게 왕조를 유지한 조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라일을 기록하였다. 글자로 기록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림으로도 남겼다. 그런 나라는 인류사에 오직 조선 하나였다. 앞으로 천년 후 그런 나라가 또 있을까?

#장면 3: 기록과 지식

기록하는 일은 난해한 일이다. 구두점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이 이어진 한문은 숫제 암호이다. 요즘 우리는 구두점을 붙여 읽어내지만 그 역시 우리 글로 번역을 해내지 않으면 도저히 읽을 수 없다. 번역을 해 놓은 글 또한 이해하기 어렵기는 매 한가지이다. 글자를 배우는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인류의 꿈은 이루어질까? 알렉산더 대왕의 유지를 받아서 프톨레미 3세는 알렉산드리아에 인류 최초 최대의 지식의 보고로서 도서관을 만든다. 도시방문객 누구에게나 언어나 분야에 상관없이 책을 한 권씩 들고 들어와야 입성을 허락했다. 왕은 이 책들을 복사해 새 책을 만들어 도서관에 소장케 하고 원본은 돌려주는 지식 공유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여하튼 기록을 남기고 싶은 인류의 소망은 역사를 만들고 역사는 지식으로 발전했다. 조선의 왕은 가장 좋은 자리에 규장각 도서관을 지었으며 미국의 창도자 제퍼슨은 국회 도서관을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싼 건물로 짓기 위해 그의 전 재산을 털고 빚을 냈다.

기록 기술은 혁명적 혁신을 수 차례 이룩한다. 문자의 발명 이후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류문명사는

대전환을 시도한다. 활판인쇄술 발명을 계기로 책의 재료가 양피지에서 종이로 바뀌었다. 양피지는 대단히 값이 비싸서 가축 한 마리에서 양피지를 4장밖에 얻을 수 없었고, 성경 한 권을 만들려면 200~300마리의 양이나 송아지를 도살해야 했다. 인쇄술 발명 이전에는 1200쪽짜리 책 한 권 제작에 필경사 두 명이 꼬박 5년을 매달려야 했다. 종이인쇄술의 발명으로 책은 쉽게 저렴하게 보급되었으며, 이제는 누구나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렇듯 문자 해독률이 높아지자 더 저렴한 서적을 요구하는 시장 규모가 커졌고 대중교육의 시대가 열렸다.

장면#4: 역사의 소멸

역사시대가 시작된지 육천년의 전환점 21세기는 세기의 전환점이 아닌 천년의 전환점이 되었다. 전 대미문의 디지털 기록 방식은 지난 육천년간의 아날로그 기록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역사도 바뀌고 있고 바뀌다 못해 소멸하고 있다고까지 한다. 이제 더 이상 역사는 왕의 역사, 힘 센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다. 나의 역사이며 세상에서 유일한 나만의 역사이다. 그 역사는 더 이상 암호로 쓰여지지 않고 그냥 내가 겪은 아름다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일 뿐이다. 더 이상 비밀도 아니며 내가 더불어 산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즐겨 들었던 이야기들이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편집될 필요도 없으며 속일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다.

역사에 관한 한국인들은 그 정보량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는 왕들의 역사였다. 왕이 아닌 한국인들의 역사는 암묵지로 전수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 연기처럼 사라졌다. 상감청자의 비법이 그러했고 금속활자의 비법도 그러했다. 판소리가 그러하고 산조 가락이 그러했다. 왕의 이야기 왕의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한국인들은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100년 안 되는 학교의 역사는 학생의 기록을 낱알이 해오고 있었고 다시 디지털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학생생활기록부는 디지털 역사시대의 주인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왕의 역사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어서 언제 어떻게 지워져 버릴지 모르며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어느 날 하드디스크 용량 부족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Delete 키를 눌러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남기고 싶어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꾼이었다. 흑인 후보에다 중앙 정치무대 경력도 극히 짧은 초선 상원의원이 경선과 대선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존 메케인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을 이긴다는 것은 언변만으로 될 일이 아니었다. 불리한 조건의 오바마가 판세를 뒤집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의 하나는 그가 들려준 이야기의 힘에 있었다. 오바마의 이야기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은 느닷없이 어느 하루를 기억한다. "스물한 번째 생일이 지나고 몇 달 뒤, 낯선 사람이 전화를 걸어 내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오바마의 이야기는 왕의 역사일까 개인의 역사일까? 아날로그적 역사일까 디지털적 역사일까?

역사의 침전물 지식까지도 이젠 왕의 지식이 아닌 우리 모두의 지식으로 바뀌고 있다. 위키백과사전

은 이미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넘어섰다. 지식의 분류체계도 이미 폭소노미로 바뀌었고 지식의 집적 방식은 천재의 저작을 넘어서서 집단지성의 공유방식으로 바뀌었다. 디지털시대의 역사와 지식은 더 이상 분서갱유와 중체서용을 겪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왕만의 지식이 아닌 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모인 모든 사람의 집단지성이다.

장면#5: 한국교육의 미래

미래세계의 주인은 누가 될까?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까지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스키마를 머리에 새기고 태어난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미래는 한국의 학생들, 곧 한국인들의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디지털문명에 가장 편리한 한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최초의 디지털 네이티브 민족이기 때문이다. 위기만 넘기면 되는데 위기는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돈다. 아까운 씨앗들이 또 다시 백년전처럼 쇠국의 망령에 사로잡혀 국경을 넘지 못한다면 두 번째 망국을 겪게 될 것이다.

전혀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서원도 좋고 규장각도 좋고 아카데미도 좋다. 모양과 제도는 상관없다. 학습이 일어나면 그만이다.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하다. 가장 핵심적 과제는 교육과정의 틀을 깨는 일이다. 국가교육과정이 아닌 교사교육과정으로 변해야 하며 교과서가 아닌 학습내용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이 진행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말 破獄이 필요하다.

한국교육의 일등공신은 무상교육의 선두주자 국정교과서였다. 유네스코가 보내준 2대의 윤전기로 찍어낸 교과서가 전국의 초등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보급되었다. 그리고 그 교과서는 중학교까지 다시 무료로 보급되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다. 고등학교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는 교과서와 참고서라는 중층모순을 낳았다. 그 모순은 사실 처음에 초등학교의 전과와 수련장으로부터 예견되었다. 급기야는 무상급식 논쟁에까지 휘말려왔다. 이제 한국의 미래 세대는 먹는 것까지 획일적으로 통제 받는 운명에 처해있다. 이미 지식은, 아이들은 무한한 인터넷 세상으로 날아가버렸는데 선생님은 맛없는 학교 급식을 배급하려 하고 있다. 교과서, 대한민국만이 종교개혁 이전의 성경처럼 지키고 있는 고물이다. 고물을 내다 버려야 한다. 그래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 교육이 아니면 나라를 구할 방법이 없다. 나라는 세계이며 세계는 인류문명이다.



| 논단 II |

지방교육발전과 지방교육자치제도

김 남 순(본회 홍보·규정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되어 실시 된 것도 벌써 2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공과 실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는 일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는 시각이나 처한 입장에 따라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직선제와 그리고 차기부터는 일몰제가 도입된다는 입장에서 그동안의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대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논의는 향후 새로 시작 되는 지방교육대표들로 하여금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역교육의 발전과 국가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을 종래의 간선제도에서 직선제로 바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특수성이나 요구를 잘 이해하는 인사들을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민들을 대표로 하여 지역교육 발전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 해 보라는 의미이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많은 정책들은 그러한 요구와 기능을 수행하는데 큰 실망을 안겨 준 것이 사실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직전인 1990년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는 43,390,374명이었다. 그 중 경기도는 615만 4,329명, 전라남도는 250만 6,944명이었으며 경상남도에는 367만 1,059명이었다. 이러한 인구 규모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전체의 14.1%이었고 전남은 5.7% 그리고 경남은 8.4% 이었으며, 경기도를 기준으로 할 때 전남은 경기도 인구의 40.7%이었고, 경남은 59.6%에 해당하는 규모이었다.

그 후 약 15년이 지난 2005년도의 전체인구수는 47,041,434명이었고, 경기도 인구는 10,341,006명, 전남은 1,815,174명으로 그리고 경남은 3,040,993명으로 변화되어 전체 인구의 경기도 점유율은 21.9%로 7.8%가 증가 되었고, 전남은 3.8%로 1.9%가 감소되었으며 경남은 6.4%로 2.0%가 감소 되었다. 전체 인구는 8.4%가 증가 한데에 비하여 경기도는 무려 68%가 증가되었고, 전남은 28%가 그리고 경남은 18%가 각각 감소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인구 감소는 학생 인구에서도 마찬가지이었다.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5세 미만의 학령인구는 전체 8,989,128명이었으며, 그중 경기도 인구는 2,225,010명으로 24.7%에 해당하였으나 전남은 338,800명으로 3.7% 그리고 경남은 609,457명으로 6.7%에 불과한 규모로 전남과 경남은 현저한 인구 감소현상을 보여주었다. 지방교육 자치단체의 보고(중앙투자심사 보고자료, 2010년 6월)에 따르면 2009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의 전체 학생인구수가 경기도는 263만 5,379명이었다. 같은 시기에 전남은 34만 3,889명이었고 경남은 59만 8,401명이었다. 이러한 규모는 경기도의 13%와 22%에 불과한 규모이었다. 이러한 학생인구를 지금과 동일한 비율로 변화된다고 가정 할 때, 2013년가 되면 만 4세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의 학생인구 규모가 경기도는 212만 2,027명으로 그리고 전남은 27만 1,411명, 경남은 46만 97명으로 감소 할 것이며, 경기도를 기준으로 할 때 전남은 경기도의 12%, 경남은 21%로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편중현상으로 인구감소추세를 노골적으로 보이는 지역은 비단 전남과 경남만의 문제가 아닌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인구 편중은 단순한 인구편중의 문제가 아닌 국토의 불균형발전, 산업구조의 문제와 식량산업의 문제, 주택문제 등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인구 편중의 문제, 즉 급속도로 인구감소 추세가 가파른 지역들의 학교교육문제는 소위 소규모 학교의 문제로 이어졌다. 소규모 학교들은 교사 당 학생 수의 문제, 단위 학교운영비용의 문제, 교사 잡무 등으로 나타나 결국 지난 1982년부터 정부 당국은 소규모 학교문제를 거론하면서 통폐합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정책은 매우 당연한 정책처럼 실천되어 왔다. 즉 최소한 적정 규모 이하의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들의 효율적인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는 물론 전반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인접지역 학교들과 통합하거나 아예 폐교하여 적절한 교육과정운영과 학교시설 및 교원인사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에서이었다. 때문에 단위학교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말까지 통폐합된 학교는 무려 3,349개교 이었다.

그러나 일부이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산어촌지역의 학교기능은 단순한 학령기 아동들의 교육기능만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고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민들 간의 문화소통의 창구로서의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농산어촌의 중요한 문화센터로서의 지역학교가 폐교됨으로써 그나마 지역구성원들의 연대감과 문화유지 및 창조적 역할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아주 작은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소위 도도한 경제논리에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최소한 단위 학교에 배치되어야 할 교직원과 교과담당교사, 학교 운영경비, 각종 시설 운영경비 등에서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턱없이 높은 학생당 교육비용이 지불된다는 주장에 할 말을 잃게 한 것이었

다. 설상가상으로 정책 당국은 이러한 경제 논리를 앞세워 소위 시·도교육청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포함시켜 지방교육행정당국으로 하여금 정책의 일선에 서서 실행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왔다.

결국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은 국가 수준에서 추진되었고, 그러한 통폐합 정책으로 급속한 감소추세를 보인 것은 주로 비 수도권지역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지역은 소위 농어촌이 밀집되어 있는 전남지역이 718개교 21.4%이었고, 경북지역 608개교로 18.1%, 경남지역 510개교 15.2%, 강원지역이 406개교 12.1%이었으며, 이들 4개 지역을 합하면 전체의 66.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모두가 급속한 인구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급속한 인구감소 문제를 위하여 최근에는 특단의 조치들- 육아 비용 지원, 각종 면세 혜택, 이주 지원비용과 주택 매입비용 지원 등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20여년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도입과 실행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남긴 결과는 이러한 인구 감소 말고는 뚜렷한 성과물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곧 심각한 문제이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극심한 인구감소와 그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이었으며, 이러한 정책은 갈수록 극심한 인구 편중과 국토 불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1952년 교육법이 통과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포함하여 국가·사회의 다양한 상황변화는 수차례의 중단과 변형을 거치도록 하였고, 현행 제도로 정착된 것은 지난 1991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부터이다.

물론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부분적인 개정과정이 있었지만 동일한 자치단체 내에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로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재정적 낭비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일반자치단체와의 연계, 일반자치단체 장의 교육에 대한 관여권한과 책임부여문제, 기초자치단위의 교육자치 실시문제,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의 선출방법과 관련된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거나 논의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추구하는 방향과 기본정신은 크게 변함이 없는 듯하다.

이러한 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적인 가치는 지방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교육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그리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교육·과학·기술·체육·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하고, 필요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가치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위하여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

이제 지방교육자치단체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방교육의 안정화를 추구 할 수 있어야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교육적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전문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

양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으며, 일면 당연히 주장되어야 할 정책 일 것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들을 지방의 특수성과 주민의 교육과 복지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는 그야말로 지역발전차원에서 강도 높은 논의와 주민 의견들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야 한다.

이제 새로운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이 선임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직무를 시작하고 있다. 진정으로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단체로 일대 혁신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지난 26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청 과장급 이상 전체 직원과 산하 동·서부 교육청 간부들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의회의 요구에 따라 시교육감 이하 전체 간부들은 물론, 이들의 답변을 보조하기 위해 사무관급 이하 대다수 직원들이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하자마자 시의회로 빠져나갔으며 오후 5시 무렵까지 감사가 계속돼 이날 시교육청은 휴일과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다. 이 때문에 수능이후 학생지도와 대입상담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으려는 교원들과 중등교사임용시험을 앞둔 수험생 등 각종 교육관련 민원인들은 텅 빈 교육청에 불만을 나타내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2005.5 모지방신문)..라는 기사가 나지 않아야 한다.

주민이 직접 뽑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의연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 정책으로 소규모 학교 정책에 대해서 지역의 안정과 미래를 심사숙고하여 수용여부를 가릴 줄 알아야 하며 새로운 정책을 계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심각한 지방인구감소의 원인들로 산업구조의 변화와 농수산업의 사양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의 하나를 든다면 교육문제일 것이다. 국민정서를 고려 할 때, 자녀교육의 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들에 선행하며 좋은 대학진학 = 사회적 성공이라는 공식이 일상화되어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도시지향, 교육환경이 좋은 학교 선호는 피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왔다. 도시중심의 경제개발과 발전을 포함하여 문화적 수준은 도시지역과 그 외의 지역들 간에 현저한 학교교육 성과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잠재 해왔다. 설상가상으로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은 그러한 도시집중의 사회구도를 보다 완화하거나 제동을 거는 역할이기 보다는 더욱 부추기는 윤희유로써의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교육을 인구유입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자녀교육에 열정을 다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학교가 만들어 운영되어야하고, 적절한 프로그램과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은 지역교육의 수장으로써 지역교육의 심각성을 스스로 체감하여야 하며 지역 특수성을 철저히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처처소소에 잠복해 있는 지역교육의 현안을 살살이 뒤져 살펴보아야 하며 가장 절실한 지방교육의 문제를 살피 정책으로 끌어 내 표

면화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평가를 통한 통제, 평가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서열화하고, 재정지원이라는 당근을 가지고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발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초연하게 국가 발전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지역교육의 발전 방안을 지역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그러한 정책이 수용되도록 하려면 지방교육자치단체들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효율적으로 모색하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6.2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좌파 진보 후보들이 시도 '교육사령관'으로 대거 입성함에 따라 교육현장은 물론 교육당국의 정책 기조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칠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나와서는 안 된다.

지역교육발전에 결코 좌파 우파가 있어서는 안되며, 정부를 심판하는 도구로 교육이 전락되어서도 안된다. "5개 시도 의회 교육위원회는 개원 초반부터 식물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기사를 보아서도 안 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소위 지역교육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 국제중,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학생인권조례,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교사들의 계기교육, 체험학습, 연가투쟁, 교원징계, 수능성적 공개, 교원평가, 학교정보공개, 교직원명단 공개,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학교인사위원회, 교장공모제, 방과후 학교, 학군제, 고교선택제 등 주요 정책들은 철저히 지역교육의 발전적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래서 2020년 정도에는 전국이 균등하게 잘 사는 자녀교육을 위하여 농산어촌으로 이주하는 아름다운(?) 한국이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 본다.

김남순(2004).교육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향. 한국교육연감

김남순(1998).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함께하는 전남교육(2009).전남교육청.

통계청. http://www.kostat.go.kr/nso_main/

행정자치부(2002).『2002 행정자치백서』서울: 상영문화,

Joins 뉴스(2010.7.23):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

(연합뉴스)



I 논단 III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행정

유 현 숙(본회 부회장선출위원장, 한국교육개발원 고등·인재정책연구본부장)

I

우리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급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교육은 이제 중요한 서비스 상품이 되고 있고, 원하는 교육을 주고받기 위해 국경을 초월하여 학생과 학자들이 빈번하게 이동하고 있다. 비록 초·중등단계에서는 제한적으로 유학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각종 연수 등의 명목으로 과거에 비하여 훨씬 많은 학생들이 해외 교육 경험을 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경우는 더욱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교육 단계의 경우 우리나라는 OECD 지역에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학생들을 유학 보내고 있다. 학자들의 이동도 지난 10년간 약 3배 정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OECD, 2009).

이와 더불어 국내로 이주해 오는 외국인의 증가와 이민자와의 결혼을 통한 12세의 증가는 우리 학교 문화를 다양하게 변모시키고 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과 이민자 수는 총 110만 명에 달하고, 그 중 외국인 근로자 수는 57만 6천명에 이른다. 이민자 중 국제결혼을 통한 국내 이민자 수는 12만 6천명에 이르며,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는 10만 8천명에 달하고 이 중 6세 이하가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다(이재분, 2009). 머지않아 "다문화(多文化)"가 우리의 학교 문화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단일 민족임을 교육했고 학습했다. 얼굴색이 다른 아동들과 한 울타리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도 적었다. 그러나 이제 다문화 상황에서의 교육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고, 학생들의 교우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역시 주요한 교육환경 변화다. 컴퓨터로 대표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학생들의 정보획득 및 처리 능력은 과거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다. 물론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의미 있는 교육내용이 무엇이어서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과거에 비하여 학생들의 정보 수합 및 처리능력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바와 같

은 일반적이고 주입식인 교수(teaching) 위주의 교육은 통용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보다는 학습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학습자의 인지적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 그 이유는 컴퓨터의 정보처리 능력은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과 유사하다는 점을 상정하고 고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 정보사회에서 창의적인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는 인지과학적 접근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국가적·개인적 차원의 투자가 증대됨에 따라, 교육의 책무성 및 성과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는 점도 중요한 환경요인 중의 하나다. 우리의 공교육은 해방 이후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주효했고,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높은 교육열도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는 공적인 비용은 물론 사적인 비용을 크게 지불해 왔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그 비용지불에 한계를 느끼고 있고,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공교육비는 증대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 교육비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학교는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II

교육행정의 역할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활동을 지원·조장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교육행정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심사숙고가 요구된다. 필자는 우리 교육행정학회가 이를 위해 앞으로 심도 있게 토론해 나가기를 바라는 점들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결정의 중요성

근래 많은 교육정책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정책과 의사결정들이 교육 현장에 직접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성과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교육문제는 많이 쌓여 있다. 그리고 교육문제의 인과관계도 불명료한 경우가 많다. 흔히 교육행정의 아트(art)적 속성을 이야기 하곤 한다. 분명 교육행정가의 리더십, 통찰력, 영감 등이 교육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육행정이 아트적 성격을 가졌다고 하여 교육행정가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상상력, 통찰력 또는 영감 등 만이어서는 곤란하다. 교육행정의 과학적 속성도 매우 중요하다. 예술성으로서의 능력은 특정 교육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적 인지, 교육문제들 간의 인과관계 규명, 문제에 관련된 변인 규명, 성과제고를 위한 과학적 접근 등이 조합될 때 더욱 강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 능력들은 데이터에 기반한(data-based) 정책 및 의사결정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고양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교육정책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적인 치유를 위한 대응(對症)적 방법으로 고안될 수밖에 없고, 정치적 입장의 차이나 이익단체의 입장 차이에 따라 목표가 전도되어 결정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문제 진단,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의 모색, 그리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상에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해나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교육현상에 관한 데이터는 관찰데이터(observational data), 실험데이터(experimental data) 등이 단면데이터(cross-sectional data), 시계열데이터(time series data), 패널데이터(panel data) 등의 형태로 구축되어야 한다.

최근 여러 학회들이 공동으로, 종단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교육 문제를 분석하고, 교육문제 간의 인과관계 등을 규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위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여 진다. 우리 교육행정학회의 경우도 이에 부응하여 다양한 영역의 교육 문제들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을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정책 평가의 과학화 · 활성화

많은 교육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있지만, 정책의 성과 평가는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에 대한 책무성 제고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성과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대규모의 정책과 사업들이 수행된 이후 그에 대한 성과 평가는 소수 학자들에 의한 정책연구 수행 및 보고서 제출로 완료되는 경우가 많다. 무엇이 진정 그 정책의 목표였는지에 대한 평가 목표를 명료화하고, 과학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교육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는 현재보다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점, 이를 위해 우리 학회에서도 교육 정책 평가의 과학적 접근에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싶다.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우선 정책의 목표를 명료화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보면 당초 의도했던 정책 목표가 정책 집행과정에서 희석되거나, 목표가 추가됨으로서 초점이 상실되거나 다초점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표가 중복되는 사업이 등장하기도 한다(예컨대, 사교육 관

런 정책, 방과 후 학교 정책, 공교육 선진화 정책 등은 명칭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중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과학적인 정책평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정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에 정책 집행 후의 성과 평가까지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소수의 학자들에 의한 형식상의 정책 평가만 이루어진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유관한 후속 정책을 위한 계획수립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업수행비에 비해 성과평가를 위한 예산은 전무하거나 빈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정책은 그것으로 인한 파급효과까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정책이 의도 했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정책으로 인한 역기능이 더 많았다면 정책의 지속성 여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성과평가를 위한 방법들도 보다 정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 분석하는 이중차감 방식(double difference)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만을 대상으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들과 지원을 받지 못한 기관들 사이에 사업 실시 전과 후의 성과 지표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였는가를 평가하는 이중차감 방식은 정책평가를 보다 엄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다양한 통계 기법 등을 활용한 정책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글로벌 다문화 환경에 부응하는 교육행정

글로벌화의 전개, 다문화 학교의 증가는 이에 부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과 경제에 있어서의 글로벌화는 각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문화와 풍토에 맞는 시민의식을 교육하는데 새로운 관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세대 간 혹은 각 계층별 입장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조화롭게 해결하고 자국의 문화나 전통 및 가치 창출을 위하여 새로운 시민의식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외국인 학생의 증가,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으로 학교의 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제 비교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학력이 높을수록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김태준, 2009). 우리는 외형적으로 글로벌화 다문화로 변모하고 있으나, 심적으로는 오히려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화와 다문화 학교의 증가는 어찌할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글로벌 시민의

식의 고양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1세기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시민의식으로는 정체성(identity), 권리와 자격에 대한 인식(right and entitlements), 책임과 의무감, 공적참여(active in public affairs)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수용 등이다(Cogan, 2000을 인용한 김태준, p.8).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능력들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문제에 접근하고 조망할 수 있는 능력, 타인과 협동하고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능력, 환경보존을 위해 소비습관이나 생활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할 줄 아는 능력, 지역과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후대들이 글로벌 다문화 사회에서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들을 반드시 구비해야 함에도, 교육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 및 행·재정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교육 행정가는 이러한 다문화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다문화 학교의 속성이 강한 경우 교장 공모를 위한 모집 문안에 다문화 학교 및 다국적 학생들을 통솔해본 경험 여부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

학문간, 기관간, 사람간, 정보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행정

지식 정보화 사회,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인근 학문과의 네트워크, 다양한 기관간의 네트워크, 다양한 정보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교육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경제학자들이 교육문제에 관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제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최근에는 인간의 인지적 정보처리 능력과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 과정의 유사성을 들어 교육은 인지과학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복잡계 이론을 들어 물리학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고, 사회학, 정치학, 경영학 등과도 연계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 현상의 특수성을 들자면,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는 회임기간이 다른 현상에 비하여 길고, 자아실현 등의 비가시적인 산출이 있으며, 인간행동의 바람직한 형성이라는 본질적인 목표 등을 들 수 있다. 이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인지과학과의 접목을 통한 학습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제한된 자원 하에서 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과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경제학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교육의 정치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학적인 관점이 요구되는 등 인접 학문과의 연계를 통한 융합적 접근(converged approach)이 필수적이다.

또한 교육을 위해 유관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교육기관,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교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각기 수용권의 범위(zone of acceptance)내에서 나선형적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 교육기관, 민간은 각각 전문성과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교육을 위한 합리적인 자원의 배분, 교육기관의 질 관리, 규제와 탈규제의 균형 유지, 교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학부모의 경우는 자녀의 학습권 보장에 그리고 지역사회의 경우는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한 물질·심적 지원을 통한 교육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체제는 교육정책이 합리적인 집행과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오늘날 많은 교육정책들이 이해 집단 간의 갈등을 둘러싸고 대립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그것은 정책의 초기에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거나 각 집단들이 수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주장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육행정은 이러한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한 교육효과의 저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안에 대한 학문적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관간 네트워크는 결국 사람간의 네트워크가 되고 정보간의 네트워크가 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이재분(2009). 다문화가족 역량개발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방안 모색.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OECD(2009). Education at a Glance. OECD:Paris.

※ 본지에 게재된 논단의 내용은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교육행정사칼럼 제4호 |

전통사회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어떻게 했나? - 조선 후기의 사례

박 수 정(안양대학교)

들어가면서

최근 실시된 국가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둘러싸고 교육계 내외에서 논란이 뜨거웠다. 평가의 목적과 결과의 활용, 전수조사의 필요성, 각종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쟁점이 부각되었다. 사실, 이것은 '평가' 측면에서의 이슈라기보다는 평가에 대한 '정책' 측면의 이슈라고 해야 옳다. 국가적으로 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운영해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고 효과적인가? 이에 대한 논의가 교육행정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다른 사례를 참조할 경우, 통상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각을 조금만 돌려본다면,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어쩌면 그보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기는 했나?" 라는 질문을 먼저 받을지 모르겠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전통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지방관을 통하여 정기적 개별적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전통사회의 평가방법

전통사회에서 국가적으로 학업성취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지방관, 즉 수령(守令)과 관찰사(觀察使)가 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가능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수령과 관찰사에게 '교육활동 점검 및 평가'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선후기의 각종 목민서(牧民書)에도 그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지방관이 직접 담당했던 평가의 유형은 고강(考講), 순제(旬製), 백일장(白日場)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고강은 강경(講經), 순제와 백일장은 제술(製述)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강경과 제술은 조선시대 학교에서 이루어진 일상적 학습의 대표적인 두 형태이자 과거를 비롯한 각종 시험 및 평가의 양대 방법이라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를 가진 평가활동이었다. 고강, 순제, 백일장 모두 학교 차원에서 실시하는 평가방법이었는데, 관(官)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세 가지 평가방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전통사회의 평가 방법

구분	고강(考講)	순제(旬製)	백일장(白日場)
내용	강경(講經)	제술(製述)	제술(製述)
방법	구술평가, 면대면	지필평가, 재택시험	지필평가, 집합시험
평가	1회, 누적	1회, 누적	1회
주체	관, 학교	관, 학교	관, 학교

고강은 책을 어느 정도 외우고 풀이하는가를 시험하는 전통 사회의 평가 방법이다. 주로 경전이나 법전, 병서, 의서 등이 대상이 되는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일상적인 평가 방법의 하나로, 국가에서는 해당 분야의 관리를 뽑을 때 선발 방법의 하나로 사용된다. '강서(講書)' 또는 '강경'이라고도 하며, 글짓기로 평가하는 제술과 더불어 전통 사회의 2대 시험방식이다. 고강은 책을 앞에 놓고 시험 보는 임문(臨文)과 책 없이 시험 보는 배강(背講)으로 구분할 수 있고, 암송[句讀]과 뜻풀이[訓釋]로 구분된다. 책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배강과 암송을, 장성한 사람에게는 임문과 뜻풀이를 고강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지방관의 책무, '고강'

지방관이 향교(鄕校)에 학적(學籍)을 둔 교생(校生)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강은 크게 두 가지 제도로 운영되었다. 하나는 교육활동을 점검하는 측면에서 수령이 주관하는 고강이고, 또 하나는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되어 관찰사가 주관하는 연례적인 고강이다. 『경국대전』에 '교생이 읽은 책의 일과를 매월 말에 수령이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순력 고강을 하여 권장 또는 징계하며,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교관을 전최(殿最: 평가)할 때 참고로 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는 호역(戶役)을 감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령과 관찰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생고강의 법적 근거가 된다. 전자를 '수령 고강', 후자를 '연례 고강'이라고 하였는데, 양자는 연계되어 이루어질 때도 있었고, 연례 고강이 수령의 업무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먼저 수령 고강을 살펴보자. 교생의 독서 상황을 관찰사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향교에서 올린 기록을 그대로 보고할 수도 있지만, 수령이 직접 교생들을 고강하여 그 결과를 판정, 보고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권학(勸學)의 목적에도 적합하였다. 수령 고강은 삭망고강(朔望考講)이라 하여 월 2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17세기 초 안동향교에서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수령이 직접 향교에 와서 교관과 함께 고강 혹은 제술로 시험을 보여 상벌한 후에 아울러 치부하도록 하였다. 연말에 합계하여 별과 상을 주도록 하였고, 호역 면제의 상은 역시 1년을 넘기지 않도록 하였다. 개성유수 서필원(徐

必遠)과 같이 삭망고강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조정에 보고한 사례도 발견된다. 이와 같이 수령 고강은 월 2회 직접 향교를 방문한 수령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월 2회는 잦은 횃수였고, 정확한 횃수를 준행하는 것보다는 수령이 정기적으로 교생을 직접 평가한다는 점, 그리고 향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점검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다.

관찰사의 책임으로 있는 연례 고강은 조선 후기에 더욱 강화되었다. 조선 후기의 연례 고강은 관찰사 수하의 도사(都事)가 도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실시하였다. 흉년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반드시 실시하였고, 이 경우에도 관찰사의 장계(狀啓)가 있어 조정의 허락이 떨어져야 당해연도에 한해 정지되었다. 이러한 연례 고강은 18세기부터는 도사와 수령이 나누어 담당하였다. 교생을 고강을 통해 액내(額內)와 액외(額外)로 구분하고 성적이 뛰어난 자를 액내로 하고 결원이 생기면 액외에서 차례로 올리도록 하였다. 액외생은 수령이 1년에 1강하여 낙강자(落講者)를 군액(軍額)에 보충하게 하고, 액내생은 도사가 순행하면서 제비를 뽑아 시강하고 낙강자는 정역(定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도사와 수령이 함께 연례 고강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었고, 수령에게는 그동안 수행해 온 고강 외에도 연례 고강의 직무가 추가로 부과되었다.



전주향교 명륜당 : 지방관이 주관한 교생 고강은 강학(講學)의 공간이었던 명륜당(明倫堂)에서 주로 실시되었다.

지방관의 자체적인 평가 활동

고강이 지방관에게 부여된 국가적 책무라고 한다면, 제술 실력을 평가하는 순제와 백일장은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측면이 강했다. 순제는 '열흘에 한번 치루는 제술 과제'라는 뜻으로, 관학과 사학을 막론하고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과제의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백일장과 대비하여 사용되는 순제의 뜻은 집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시험, 즉 재택 시험을 뜻하고, 백일장은 한 곳에 모여서 답안을 작성하는 시험, 즉 집합 시험을 뜻한다.

조선 후기에 순제와 백일장은 매우 활성화되었고, 이에 대한 지역민의 반응은 높았다. 『목민심서』에는 지방의 백성들이 순제와 월과(月課)를 과거(科擧)와 같이 생각하므로 수령이 이 제도를 올바르게 운영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며, 과거제가 문란하게 운영된다 하더라도 각 지역에서만큼은

수령의 주관으로 평가행정을 제대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과거제도가 문제가 많다 해도 그것을 폐지해서는 안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지방에서 순제와 백일장을 시행하는 주체는 크게 학교와 관으로 나뉜다. 향교와 서원 등 학교에서 주최하는 경우가 있고, 관에서 관내 유생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전자의 경우에도 관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19세기 초에 실시된 소수서원(紹修書院)의 순제와 백일장 사례를 보면, 서원에서 수령에게 시제(試題)를 출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목민심서』에는 수령이 임지에 서적을 가지고 가는 이유의 하나로, 과문(科文)을 공부시키려면 고사를 참고하고 글제를 찾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수령은 교육행정이 일뿐만 아니라 교육평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순제와 백일장을 실시할 때에도 우수자 시상품으로 지필묵(紙筆墨)을 구입하거나 시험이 끝난 후 잔치를 벌이는 비용은 관에서 부담하였다. 또한 관에서 주최하는 백일장을 통해 양사재(養士齋)에서 일정기간 거접(居接)시킬 학생들을 선발하기도 하였으니, 평가를 매개로 하는 관과 학교의 협력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수령 뿐 아니라 관찰사도 백일장을 설행하는 주체가 되었는데, 경상도관찰사 조재호(趙載浩)의 사례(18세기 중반), 전라도관찰사 서유구(徐有渠)의 사례(19세기 초반) 등이 기록에 남아있다.

전통사회 평가행정의 특성과 의미

수령이 직접 고강하거나 시제를 출제하고, 성적의 등위를 매기고, 우수자의 시상을 맡는 일련의 과정은 관에서 고강, 순제, 백일장을 주최할 때 일반적인 과정이었다. 평가 장면에 있어서는 주체가 관이든 학교이든 동일하였고, 각종 의례와 절차를 엄격하게 수행하였다. 고강을 통하여 경학 실력을, 순제와 백일장으로 제술 실력을 평가하는 것은 수령의 일상적인 직무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민의 학업 실태를 점검하고 또한 학업을 권장, 격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좀더 치밀하고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하나, 지방관의 책무로 규정되었던 평가활동인 고강을 중심으로 전통사회 학업성취도 평가의 특성을, 탐색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다. 첫째, 평가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수령에 의하여 월 2회의 고강이, 그리고 도 단위에서 연례적으로 고강이 실시될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둘째, 평가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강이라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1:1의 면대면 평가였고, 개인의 학업 수준과 진도에 맞추어 개별화된 평가가 이루어졌다. 셋째, 평가는 교육적으로 이루어졌다. 평가가 교육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평가 자체가 교육의 과정 내지 일부로서 평가를 통해 학습이 진작되고 권장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전통사회의 평가가 지금의 평가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두 제도의 비교를 어렵게 한다. 과거의 평가 역시 부작용이 있었을 것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대처 방식도 낳았을 것이

며, 규정과 실제의 괴리 또한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지역적 차원에서 반드시 평가하도록 했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기적, 개별적, 교육적으로 이루어진 전통사회의 평가행정이 오늘날의 평가에도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조선시대에서 고강의 결과는 학생을 상별하고 교관을 평가하는데 활용되었다.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원 평가에 반영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교원 평가의 지표를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포함한다면, 이것은 오늘날 어느 나라의 사례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과거 사례를 반영한 것이 된다. 다음 칼럼은 전통사회의 교원 평가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조선시대 지방교육행정 연구")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여 작성하였고, 참고문헌은 상기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학회 활동 안내

1. 학술대회

❖ 제157차 학술대회 개최 완료

- 일 시 : 2010년 6월 12일(토) 13:30-18:00
- 장 소 : 연세대학교(서울) 용재관
- 주 제 : 미래지향적 학교발전모형 탐색

❖ 제158차 학술대회 개최 예정

- 일 시 : 2010년 10월 30일(토)
- 장 소 : 건국대학교(서울)(한국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와 연계)
- 주 제 : 자유주제(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 발표)

❖ 제38차 연차대회 및 159차 학술대회 개최 예정

- 일 시 : 2009년 12월 12일(토)
-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예정)
- 주 제 :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기획

❖ 학술세미나 개최 예정

- 일 시 : 2010년 8월 19일(목) 13:00 - 17:30
- 장 소 :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 주 제 : 지방교육행정체제 선진화 방안

2. 현장교원 학술집담회 개최 완료

❖ 제 1차 현장교원을 위한 학술집담회

- 일 시 : 2010년 7월 17일(토)
-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 내 용 : 교육정책 현안을 바라보는 교원의 입장

3. 예비 연구자 학술 포럼 개최 예정

❖ 제 4차 예비연구자 학술 포럼

- 일 시 : 2010년 8월 20일(금) 13:30 ~ 17:30



-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103호
- 내 용 : 박사과정학생 학술논문발표

학술지 논문게재 안내

● 원고접수 :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 접수)

권 · 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28권 (2010년)	1호	2월 29일	4월 30일
	2호	5월 31일	7월 31일
	3호	8월 31일	10월 31일
	4호	10월 31일	12월 31일

● 원고분량 : ① A4용지 20페이지 (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 ② 이를 기준으로 5페이지를 초과 할 수 없으며, 20페이지에서 1페이지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
- ③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최대 25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음

● 심사료 : 90,000원(심사위원 3인×3만원)

● 게재료

- ① 입금시기 : 심사결과 '게재가'로 결정된 후에 입금
- ② 게재료 :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400,000원 이상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00,000원 이상
- ③ 입금계좌 : 079801-04-057012(국민은행), 예금주 : 송광용(논문)

● 원고 작성 시 홈페이지에서 작성양식(홈페이지 논문접수 접수안내 양식다운받기)을 다운 받은 후, 원고 작성 세칙 준수 요망(학회 홈페이지 참조)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현황

● 신규회원(2010. 5. 1 - 2010. 7.31)

- 개인회원 : 강가인, 권혁운, 김서영, 김순미, 김연주, 김종하, 문한중, 박란정, 박지연, 배상훈, 송유진, 오경희, 우광호, 유지훈, 윤소현, 윤현진, 이의석, 이현직, 이혜중, 조남희, 최영덕, 최정운, 최현영, 한대동, 홍사훈 (이상 25명)
- 기관회원 : 한국장학재단

● 연회비 납입현황(2010. 5. 1 - 2010. 7.31)

- 개인회원 : 강영삼, 고성진, 김상돈, 김영덕, 김용갑, 김용학, 김혜숙, 류민영, 민병조, 박삼철, 박수정, 박종필, 손경애, 송경현, 신원학, 신철균, 양재길, 오승현, 우명숙, 이기석, 이정진, 이학인, 임준희, 전재근, 정선일, 정진환, 조성구, 최혜영, 하덕곤, 현경석, 홍광식 (이상 31명)
- 기관회원 :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도서관

※정보가 잘못 표기되거나 누락된 경우 사무국(총무간사)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 관련 문의는 사무국(총무간사)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동정

❖ 축하드립니다.

주삼환: 주삼환, 정일화 역(2010). 학업성취 향상 수업전략. 서울: 시그마프레스.

주요 소식

❖ 제157차 하계학술대회 연세대학교에서 성료
교수, 대학원생, 연구자, 교육행정가 등 100여명 참여

'미래지향적 학교발전모형 탐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0 하계학술대회(한국교육행정학회 제157차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지난 6월 12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 및 대학원생과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 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및 교육행정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신현석 교수(고려대, 기획위원회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4명이 발표를 하였다. 우선 서정화 교수(홍익대)가 '미래지향적 학교발전모형 탐색'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그리고, 주제발표자로는 박종필 교수(전주교대)가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이화룡 교수(공주대)가 '환경 친화적 학교시설'을, 김희규 교수(신라대)가 '학교공동체로서의 학교'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 토론자로는 장덕호 교수(상명대), 박균열 박사(한국교육개발원), 박철희 과장(충북대), 김민희 교수(대구대), 김인희 교수(한국교원대), 최수영 박사(한남대)가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이끌었다. 마지막 종합 토론은 신상명 교수(경북대)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각 주제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참여 회원들 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기조발표 중인 서정화 교수



박균열 박사, 장덕호 교수, 박종필 교수, 신현석 교수(좌측부터)

❖ **교육정책 현안을 바라보는 교원의 입장** 주제로 제1회 현장교원학술집담회 성료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 교수 등 90여명 참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이론을 잇는다는 취지로 제1회 현장교원학술집담회를 개최하였다. '교육정책 현안을 바라보는 교원의 입장'이라는 주제 하에, 송경헌 교장(서울교대부설초)이 사회를 맡았고 총 5명의 발표자와 5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주제로 김덕희 강사(경북대), 김연주 교사(수원 조원고)가 발표를 하였고, '학생인권조례' 주제로 정소연 교사(구리 동구초)가 발표를 하였다. 마지막 주제인 '학업성취도 평가' 주제는 이천희 교사(서울 오현초), 이상규 교사(서울 서초초)가 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강성봉 과장(서울시교육청), 이쌍철 교사(부산 동평초), 김희대 교사(서울 강남교육청), 이상철 교사(부산공고), 장훈 교사(안산 화정초)가 참여하였다. 특히, 본회 전임 회장인 강영삼 교수(국민대 명예교수), 서정화 교수(홍익대)가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강성봉 과장, 김덕희 강사(좌측부터)



이쌍철 교사, 김연주 교사(좌측부터)

❖ **'제4차 예비 연구자 학술포럼' 개최 예정**
8월 20일(금) 13:30~17:30 서울교대 인문관 103호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예비 연구자인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4차 예비 연구자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2008년도부터 시작된 예비 연구자 학술포럼은 올해 4회째를 맞고 있다. 이번에는 발표 주제별 토론자를 지정하여 선배 연구자들의 조언을 듣고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만들고자 하였다. 발표자로는 류민영(경북대), 신철균(서울대), 최혜영(경북대), 심연식(연세대), 이진철(공주대) 박사과정생이 참여한다.

❖ **'지방교육행정체제 선진화 방안' 주제로 학술세미나 개최 예정**
8월 19일(목) 13:00~17:30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오는 8월 19일(목)에 '지방교육행정체제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임연기 교수(공주대, 본회 부회장)가 지방교육행정체제 선진화의 의미와 과제'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위상 재정립,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재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조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및 인사체제 개편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13:00 - 13:30	등 록
13:30 - 13:40	개회식 사회: 정수현(본회 사무국장, 서울교대 교수) 국민의례 인사말: 송광용(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김태완(한국교육개발원장)
13:40 - 14:00	사회: 조동섭(경인교대 교수) 기조발표 지방교육행정체제 선진화의 의미와 과제 발표: 임연기(공주대 교수)
14:00 - 14:40	주제발표 I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위상 재정립 발표: 조석훈(경원대 교수) 토론: 김흥주(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 이일용(중앙대 교수)
14:40 - 15:20	주제발표 II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재편 발표: 송기창(숙명여대 교수) 토론: 김재웅(서강대 교수) 양승실(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15:20 - 15:30	휴 식
15:30 - 16:10	주제발표 III 지방교육행정기관 기능과 역할 조정 발표: 박삼철(단국대 교수) 토론: 최준렬(공주대 교수) 박백범(대전교육청 부교육감)
16:10 - 16:50	주제발표 IV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및 인사체제 개편 발표: 배성근(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장) 토론: 주철안(부산대 교수) 조흥순(고려대학교 겸임교수)
16:50 - 17:30	종합토론 및 폐회

❖ 학회 요람 발간 예정: 주소록 입력 협조 요청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에서는 2010년 학회 요람 발간을 준비 중에 있다. 학회 요람을 3년만에 전체적으로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며, 이번 2010년 학회 요람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연락처를 회신하는 회원만 탑재할 예정이다.

학회 회원은 학회에서 발송한 연락처 조사 메일에 핸드폰, 근무지 등의 연락처를 입력하면 된다. 요람 명부에 본인의 이름과 주소록 기재를 원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 학회 이메일로 본인의 이름과 소속을 알려주면 요람의 회원 명부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 학회 고유번호증 등록

학회는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하여, 2010년 6월 30일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다.

* 고유번호증: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 번호

■ 학회 회원가입 활동 협조

- * 교육행정학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들이 학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입 대상 : 교육행정 관련 석사·박사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초·중등학교의 교원,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업무 담당자, 교육행정 관련 기관의 교육전문가 등
- * 회원에게 주어지는 특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행정학연구지 년 간 4권 - 뉴스레터 년 간 4회 - 학회 요람 1권
 - 각종 학술대회 참여 가능 - 교육행정학 연구지 논문 게재 가능 등
- * 가입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 가입 : www.kssea.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회비납부
(가입 회원께서는 회비납부 후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주소 및 연락처 정비

- *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으신 회원님께서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수정하신 이후에 학회 메일 (kssea1@hanmail.net)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 학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각종 소식이나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회원님들께서는 학회 홈페이지 (www.kssea.or.kr)에 접속하셔서 설정해 놓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 메일 수신에 관한 안내

- * 대학/기관의 도메인을 사용하는 회원님께 학회의 단체 안내 메일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기관 등은 단체메일을 수신 거부하더라도 개인에게 스팸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습니다. 각 포털사이트에서 단체메일 수신이 가능 하오니, 변경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kssea1@hanmail.net)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비 납부 안내

- * 본 학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학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회비 납부 현황은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연회비 안내

정회원 5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회비납부: 079801-04-056987(국민은행), 예금주 : 송광용(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 (137-7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우면로 161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414호
- E-Mail : kssea1@hanmail.net
- 전화번호 : (02) 3475-2522
- 회 장 : 송광용(010-8974-9430, 02-3475-2200)
- 부회장 : 임연기(011-9870-2053)
- 사무국 : 정수현 사무국장(016-226-6356), 신철균 총무간사(017-201-3998), 김효진 편집간사(010-5120-0814)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8.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국교육행정학회

